日, 挺身隊 공식조사 발표

南北韓 최우선… 관방장관 会見

【東京=聯合】 日本 정부는 2차대전 당시 日王 재가로 정신대 동원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南北韓을 최우선 대상으로 공식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이 7일 발표했다。

가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韓国人 정신대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南北韓만이 日本에 대해 정신대 문제를 제기했기때문에 우선 조사대상이 된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타 국가들이 연계된 사례들도 성의껏조사할 계획이라고강조했다。

日本정부의 정신대 문제 공식조사 발표는 日王이 종군위안부 동원에 관한 지시를 내렸음을 입증하는 「여자정신근로령」을 담은 문서가 발견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1992. 2. 08 조선

日王이 「정신대동원」 칙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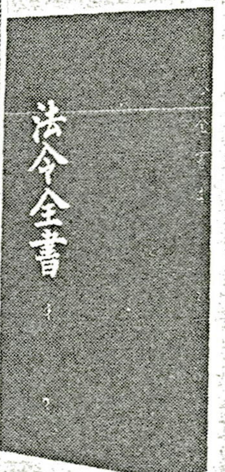
法令 발견

【天安=金昌洙기자】 일제하 정신대(挺身隊)의 동원및 관리는 당시 일왕(日王)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근로령」에 근거했던것으로 밝혀졌다。

7일 충남 천안시 성화대학 李東春도서관 부관장(55)이 공개한 일왕서명의 칙령 5백19호.여자정신근로령은 전문23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여자정신대의 고용조건과 동원권자의 의무규정등을 명시하고 있다。李부관장이 최근일본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법령전선」속에서 찾아낸 이자료는 소화(昭和) 19년인 1944년8월22일 일왕의 [illegible] 조 이 칙령21조는 일본 고이소 구니야치등 4명의 대신들의 부서와함께 공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칙령은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구장 등과 기타 단체장 또는 학교장이 대원을 선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李부관장은 『정신대 강제공출은 1937년 중일전쟁때부터 시작했는데 시행과정중 문제가 많이 생기자 뒤늦게 칙령으로 공포한 것 같다』고 말했다。



1992. 2. 06 서울

「挺身隊」 日교과서 수록 요구 방침

政府, 日側긍정반응 얻어 94학년도부터 게재 추진

정부는 日帝下 한국인 여성 종군위안부(挺身隊)를 강제 동원하는데 日本정부가 공식 개입했다는 사실등 정신대에 관한 진상을 日本의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해줄 것을 日本측에 정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日측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日정부로부터 긍 [illegible] 실·외무부·교육부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내 교과서에도 정신대문제에 대한 진상을 수록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말 전국의 市·郡·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등 총리실 산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중 日軍이 선박제공·통행증발급등 정신대 모집에 공식 개입했음을 밝히는 美정부의 공식문서(2차대전 東南亞지역 심리전 심문公報 제2권)사본등의 서류를 日측에 전달, 교과서 수록의 근거자료로 제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日本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르면 오는 94학년도부터 정신대에 관한 진상이 日교과서에 게재될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日本은 우리의 교과서 국정제도와는 달라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日정부가 교과서 수록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정신대의 진상을 수록하도록 지도등은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